

발달장애인 ‘온라인 학대’ 급증…제도 공백 ‘도마에’

광주장애인재활협회 ‘제34회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 개최

2023년 42건으로 3년새 6배 급증…익명 뒤 ‘영구적 학대’ 심각
신원 특정 어려워 수사 중단 잇따라…플랫폼 책임 강화 등 시급

#.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 2022년 네이버 밴드를 통해 낯선 이의 초대를 받았다.

1.대1 채팅방에서 자신을 ‘이라크 파병 의사’라고 소개한 그는 A씨에게 매일같이 다정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며 연인 행세를 했다.

정서적 교감이 깊어졌다고 판단한 그는 곧 본색을 드러냈다. “금괴 보관 수수료와 항공료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은 A씨는 총 4400여만원을 그에게 송금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었다.

2023년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이곳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B씨는 지원하던 발달장애인의 하의를 탈의시킨 뒤 엉덩이와 성기가 노출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씨는 이 사진을 시설 직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거리낌 없이 유포했다. 보호받아야 할 시설 안에서, 믿었던 종사자에게 당한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였다.

17일 광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4회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에서 보고된 실제 피해 사례들이다.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병노 시의원 등이 주관해 열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장애인 학대 실태와 대응 방향’이라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장애인 학대 장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학대가 가정이나 시설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통계를 인용, 전체 학대 판정 건수 중 온라인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5건·2020년)에서 2.9%(41건·2023년)로 3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학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익명성’과 ‘영구적 학대’ 구조를 꼽고 “온라인 학대는 경제적 착취와 성적 학대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친구나 멘토를 가장해 접근하는 ‘그루밍(Grooming)’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광주 장애인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박려형 광주시장에인권익옹호기관 대리는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접수된 학대 의심 사례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68.2%에 달했다”면서 “하지만 가해자가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할 경우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적·제도적 공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민 법률사무소 지을S&C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장애인 학대의 정의를 개정해 온·오프라인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금지행위 조항에 온라인 기반 학대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수사권이 없어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학대 게시물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수사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맛있는 라면 트리 17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린 ‘따순마미! 희망을 이야기하다!’ 공공어린이집 후원물품 기탁식에서 영무예다음, 양산호반, 동그라미, 송촌 어린이집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후원한 라면을 이용해 라면 트리를 만들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1년…공항 안전기준 손본다

국토부, 활주로 안전시설 강화…조류충돌 예방 기준 확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 만에 공항 안전 기준이 전면 손질된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의무화되고, 조류충돌 예방 계획과 위험도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담긴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라는 강령 규정은 참사 당시 활주로 끝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인명 피해를 크게 늘린 것으로 지적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설치 기준이 적용되는 구역도 종단안전구역(활주로 끝부분에 설치되는 안전 지대)과 이에 맞닿은 착륙대·개방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항공기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를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예방책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년 단위의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해야 하며, 운영자의 공항별 연간 위험관리계획 작성을 의무화했다.

계획에는 정책 환경 변화, 조류충돌 현황, 인력

·장비, 예방시설 구축·운영, 보고·전파 절차, 서식·이동 현황, 위험요소 관리, 위험도 평가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공항별 위원회도 내실화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상조업사(비행 전·후 항공기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조류 전문가 등도 참여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 반경 13km 내에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충돌 발생확률과 피해 심각도 등을 평가해야 한다. 각 공항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주요 충돌 예방 장비의 종류와 운영 기준도 명시됐다.

개정안은 18일부터 오는 2026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의견 제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음주 측정 방해하려 술 더 마셨다면 ‘면허 취소’

중앙행정심판위, 청구 기각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A씨는 “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가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올해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 장애인단체 “무안 장애학생 학대 의혹 엄정 수사”

전남 지역 장애인단체가 최근 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아동학대 의혹(광주일보 12월 11일 6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안군 초등학교 장애학생 폭행·폭언 의혹에 대해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인권과 존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할 교

육 현장에서 입에 담기 힘든 교사의 발언은 명백한 정서적 폭력”이라며 “자기 표현이 서툰 발달장애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즉각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교사의 모욕적인 언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안을 인지하고 반성하기보다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피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했다는 소식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의심케 한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형식적인 개별화 교육과 불통으로 점철된 특수교육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전남도교육청에게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남경찰청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전부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무안군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폐아동 A(12)군이 교사로부터 폭언 등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 **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학부 대학원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